

황철규 시의원·NKDB 공동세미나 개최...“북한인권 기록된 진실, 행동으로 이어져야”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0월 27일(월)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공동으로 『2025 북한인권백서』 및 『2025 북한종교자유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

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NKDB가 공동 주관했으며, “증언에서 책임으로, 기록에서 행동으로”를 주제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의원은 개최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 응답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와 피해자 지원체계의 실질적 가동, 법적·정책적 대응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NKDB가 20여 년간 축적한 146,136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 및 인물 기록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이승엽 NKDB 조사분석팀장은 북한 내 인권침해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으며, 최근에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순희 NKDB 총괄본부장은 북한 주민의 종교자유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조사에서 ‘종교 활동을 본 적도, 참여한 적도 없다’는 응답이 10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국내법에 명확히 없다”는 현실을 짚으면서도, NKDB 등 민간에서 시작한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관련한 민사소송 6건이 현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과 해외 법원에 서도 승소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밝혔다.

토론에서는 유엔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 장대현교회 임창호 목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법원의 판례 축적이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구체화한다며 사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강윤주 법무관은 “기록은 사법 절차의 출발점”이라며, 피해 회복과 구제를 포함한 책임 규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창호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는 한국 종교계의 북한인권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통일 이후보다 지금의 인권 개선에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열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인권익시 확산,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이 ‘인권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주장에 강력 반발 “즉각 사퇴하라”

평가 주장에 강력 반발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수능 절대평가가 도입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지난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상대평가의 폐해를 줄이려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절대평가가 전환은 수능 변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시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초래하며, 결국 일부 특권층 자녀가 명문대를 독점하는 불공정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절대평가가 도입으로 인해 학종 중심의 선발이 확대될 경우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해 사교육 부담이 증가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풍부한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도의 불투명성이 커질수록 민백과 자원이 경쟁의 변수가 되고, 그 피해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시민층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 옹호의 위선적 이상론도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절대평가가 학교 수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경쟁을 완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대학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종, 논술, 면접 등 새로운 전형을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의 목표는 성실히 노력한 학생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면서,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장성 기자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방향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키즈카페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단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모토로 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형 키즈카페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을 비롯해 인천시 영유아정책과장, 학계 관련자, 보육 관련 전문가, 민간 키즈카페 운

영자 등이 참석한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지역 내 공공형 키즈카페가 전무한 현실을 공유하고, 아이가 부모가 함께 머물며 돌봄·휴식·소통이 가능한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내 키즈카페의 민간 중심 운영 실태, 지역별 접근성 불균형 문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시설 도입 필요성,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놀이 공간 조성 방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날 참석한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교육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놀이와 배움이 결합된 지역기반 교육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단비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인천에 공공형 키즈카페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 조성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아이가 부모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기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와 교육청, 민간 등이 협력해 지역별 맞춤형 공공형 키즈카페 모델을 구축하고, 보육·문화·휴식이 조화된 가족 중심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하린 기자

김영기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법제화 환영



모색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의왕시민 7만 2,793명의 서명을 취합해 의왕시장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며,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차별받지 않도록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왔다.

현재 경기도는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지원청은 두 개 시를 통합 관할하고 있어 지역의 교육행정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김영기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개정은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의왕시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관련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수원시의회, 평택시의회 방문단 환영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영통2·3·망포1·2)은 27일 오후 수원시홍재복지타운을 방문한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문단을 맞아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평택시의회가 수원특례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양 시의 복지정책과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다.

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뒷받침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평택시의회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장을 비롯한 위원 5명과 사무국 관계자, 평택시 복지정책과 직원 등 12명은 수원시홍재복지타운 3층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둘러보고, 수원새빛돌봄사업의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송민수 기자

충남도의회,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제도 구축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희승 의원은 “수원새빛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의 공백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수원의 핵심 복지정책”이라며 “오늘이 자리가 두 도시가 함께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수원시의회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뒷받침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평택시의회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장을 비롯한 위원 5명과 사무국 관계자, 평택시 복지정책과 직원 등 12명은 수원시홍재복지타운 3층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둘러보고, 수원새빛돌봄사업의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사이버폭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폭력이 확산되면서 학생 보호와 예방 교육의 체계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학생이 사이버폭력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논의가 드디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기존 통합교육지원청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기 의원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11대 도의원 출마 당시부터 중요한 지역 과제로 생각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학부모와의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서울을 바꿉니다

불편을 편리하게! 위험을 안전하게! 부패를 청렴하게!

제보기간 | 2025. 9. 12. ~ 10. 31.

제보방법 | ☎ 02-2180-7883 www.smc.seoul.kr



2025 행정사무감사 기간 | 2025. 11. 4. ~ 11. 17. (14일간)